

# “장사 못하게 해놓고 임대료는 나몰라라... 대책 마련을”

>> 1면 '소상공인 폐업시계'서 계속

서울 상가 석달새 2만개 문 닫아 자영업자 지원요청 청원 잇따라 임대인 세금 감면지원 6월 종료 자영업자 직접적인 지원책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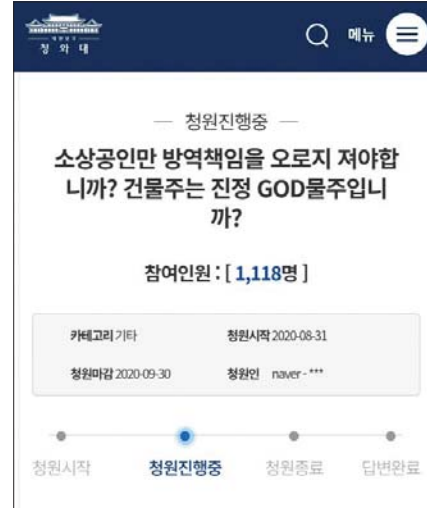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1주일 연장 시행중인 7일 서울 시내의 한 카페에 테이블과 의자가 쌓여있다. /연합뉴스

서울의 상가 수는 모든 업종에서 감소했지만 음식점이 직격타를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점은 지난 1분기 13만 441개에서 2분기 12만 4001개로 1만 40개(7.5%) 줄었다. 3개월 동안 줄어든 상가 2만여개 중 절반 정도가 음식점에서 사라진 셈이다. 이 같은 통계는 7월, 8월에 폐업한 상가가 반영돼 있지 않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매출급감 등 최근의 상황을 감안하면 3분기(7~9월) 통계에선 더 충격적인 결과가 예상되고 있다.

아지고 있다.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된 지난달 30일부터 이날까지 자영업자 지원을 요청하는 글은 총 25건이다. 특히 이들 중 절반이상(14건)은 임대료 지원 등을 요구했다. 일주일 영업을 중단될 경우 자영업자는 월 매출의 20% 이상 손실이 불가피하다. 거리두기 2.5단

계가 일주일 더 연장되면서 기존과 같은 임대료 지출은 적자가 불가피하다. 한 청원자는 “코로나19로 매출의 절반이 줄면서 카드론으로 연명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나라에서 장사를 못하게 하는데 임대료는 꼬박꼬박 내야하는 것이 납득이 안된다. 계약기간이 남아 폐



코로나19 쇼크로 음식점 등 자영업자의 매출이 급감함에 따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는 지원 요청글이 쏟아지고 있다.

업도 못하고 있다”고 했다. 아직까지 정부는 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초기 ▲착한 임대인 운동 ▲지자체 소유재산 임대료 인하 ▲공공기관 소유재산 임대료 인하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같은 지원은 지자체나 공공기관 등이 소유한 건물이어야 가능하다.

정부가 임대료를 내리는 임대인에 대해 소득 및 인하 금액과 관계 없이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하는 방안도 지난 6월에 종료됐다. 2차 긴급대출 또한 1차 긴급대출을 받지 않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한도도 1000만원으로 1차(7000만원)보다 대폭 낮아져 지원폭이 좁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업체는 기존 임대료 지원 사업을 연장하는 대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직접 지원책을 늘리고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으로 영업에 제한이 생긴 식당과 PC방, 노래방 등 집합금지 조치업장에 대해 임대료를 8~9월에 한해 직접 지원하고, 임대료 한정 금융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누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 2금융 너마저... 저축은행, 대출 문턱 높인다

상반기 중소기업 대출 규모 줄어 부실화 가능성에 리스크 관리 차원



/연합뉴스

코로나19 직격탄으로 자금난에 빠진 개인사업자, 중소기업 등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서민들의 대표 금융창구인 저축은행도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여신 리스크 관리를 위해 저신용 차주에 대한 대출을 꺼리고 있는 것.

원인 감소했다. 반면 SBI저축은행, 한국투자저축은행은 중소기업 대출액이 늘었지만 전체 규모 대비 성장폭이 크지 않았다. 저축은행이 이같이 대출 문턱을 높이는 이유는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장기화되면서 중소기업 대출의 부실화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 3월 정부의 금융지원이 끝난 이후 연체율이 급등하는 등 건전성이 급격하게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즉, 언제 터질지 모르는 리스크를 안고 있는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대출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필수라는 분석이다.

현재까지 저축은행은 정부의 대출만 기연장, 이자 유예 등의 지원으로 양호한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은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해 대출 리스크 관리가 불가피해 진 상황이다.

현재는 정부가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해 신규 대출 및 만기 연장, 이자 유예 등의 조치를 지원하고 있어 이들의 실제 연체 상황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의 매출 감소세가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해도 대출을 쉽게 내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특히 사업자 대출의 경우 내년에도 정부 지원이 끝난 이후 상황이 크게 우려되고 있어 건전성 관리에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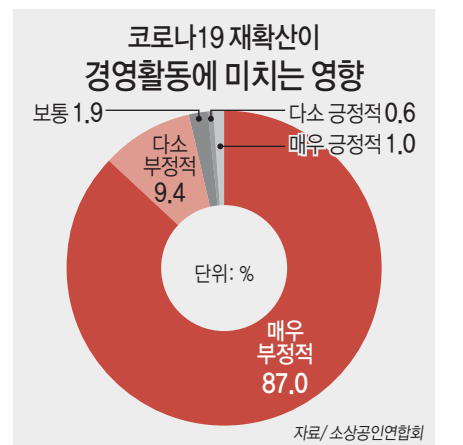
7월 각 사 저축은행이 공시한 상반기 실적에 따르면 OK저축은행과 페퍼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이 전 분기 대비 중소기업 대출 규모가 줄었다. 전체 대출 자산이 늘어난 것과는 대조된다.

때문에 저축은행 입장에서도 사업자 대출은 더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OK저축은행의 2분기 중소기업 대출 규모는 3조 71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1249억원이 줄었다. 이어 페퍼저축은행이 1조 2473억원으로 410억원이 줄었고 웰컴저축은행은 9498억원으로 2억

## 소상공인 96% “코로나 재확산 타격입어”

소상공인연합, 전국 소상공인 설문 10곳 중 8곳 매출 80% 이상 떨어져 임대료 가장 부담, 대출이자 뒤이어 긴급경영안정자금·재난수당 ‘절실’



자료/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의 96.4%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장사에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6.2%는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80% 이상 빠졌다’고 답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소상공인을 위한 재난수당’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정부가 장고에 들어간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선 96.1%의 소상공인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과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의식업, 도·소매업, 개인서비스 등 전국 3415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재확산 관련 영향 조사’를 실시해 7월 내놓은 보고서에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매우 부정적’은 87%, ‘다소 부정적’은 9.4%로 응답자의 96.4%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이외에는 ‘보통’ 1.9%, ‘매우 긍정적’ 1%, ‘다소 긍정적’ 0.6%였다.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액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선 ‘-90% 이상’이 60%에 달했다. ‘80% 이상 매출이 빠졌다’는 응답도 16.2%였다. 76.2%의 소상공인이 -80% 이상 매출이 하락한 것이다. ‘-50% 이상’도 15.3%였다. 응답자의 91.5%가 절반 이상 매출이 줄었다고 답한 모습이다. ‘증가했다’는 답변은 고작 0.1%였다.

매출 하락에 따른 피해액은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이 31.3%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1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24.5%, ‘1000만원 이상~2000만원 미만’이 9.7%였다.

‘피해액이 없다’는 답변은 2.9%에 그쳤다.

재확산에 따른 경영비용 부담 중에선 69.9%가 ‘임대료’를 꼽았다. ‘대출이자’ (11.8%)와 ‘인건비’ (8%)가 부담스럽다는 답변도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관련 각종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소상공인 관련 우선순위 정책으로는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이 35.4%로 1위를 차지했다. 이외에 ‘별도의 재난수당 지원’ (26.1%), ‘임대료 지원’ (22.3%) 등을 주로 꼽았다.

또, 지원이 절실한 공과금 중에선 ‘지방세 및 국세 감면’ (46.1%)과 ‘전기료 감면’ (45.6%)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런 가운데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해선 87.3%가 ‘매우 필요’, 8.8%가 ‘다소 필요’하다고 답했다. ‘(다소+매우)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은 2.9%였다.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묻는 질문에는 68.5%가 ‘선별적 지급’을, 29.7%가 ‘전국민 지급’을 각각 꼽았다.

아울러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 ‘지역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냐’는 질문엔 71.7%가 ‘다소 호전’, 13.8%가 ‘매우 호전’될 것이라고 답해 85.5%가 ‘호전’을 예상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 직접 지원, 정책금융 수준의 대출 확대 실시 등 정부가 직접 나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

## 단일수출, 역대 최대... 美 5G 진출 이정표

>> 1면 '삼성, 美에 5G장비'서 계속

이를 통해 화웨이와 퀄컴 등 네트워크 장비 부문 선도 업체들을 추격하는데 성공하며 5G 세계 최초 상용화 등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이번 대규모 수주를 통해 국내 경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네트워크 장비와 관련해 국내 중소 장비 부품회사 86개사와 협력하는 등 국산화에 힘을 기울인 덕분에, 5G 장비 국내 부품 비중이 50% 수준에 달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미국과 인도, 유럽 등 새로 5G 통신을 구축하려는 국가들을 상대로 장비 공급을 위한 활동을 벌여왔으며, 10년 앞을 내다 보고 ‘6G 백서’를 발간하는 등 네트워크 장비 부문에서도 초격차를 준비 중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전략적인 장기 파트너십을 통해 버라이즌의 고객들에게 향상된 모바일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5G 혁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삼성 서초사옥에 걸린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김재용 기자 juk@